

# 교육

## 개관

2015년 9월 고시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17년 초등학교 1·2학년생들이 바뀐 교과서로 수업을 받았다. 국어는 '연필 잡기'부터 시작해 한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수학·영어 등의 과목은 교과서 쪽수 기준으로 분량이 20%가량 줄어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덜었다.

세월호 사태를 계기로 초등학교에 안전교육 시간이 생겼다. 중학교에는 학생들이 지필 평가 없이 진로와 적성을 탐색할 수 있도록 자유학기제가 확대됐다. 고등학교는 서열화 등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등에 대해 2018년부터 일반고와 동시에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했다.

애초 2021학년도 시험부터 통합과목이 생기고 절대평가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던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수능 변별력 약화에 따른 정시모집 축소와 수시모집 확대를 우려한 여론 때문에 개편이 미뤄졌다.

저출산 현상과 교육부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노력에 따라 2017년 4월 1일 기준으로 학급당 학생 수는 유치원이 19.0명, 초등학교가 22.3명, 중학교가 26.4명, 고등학교가 28.2명을 기록했다. 10년 전에 비해 학급별로 약 5~10명가량 줄어든 수준이다. 학급당 학생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보다 많지만,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함에 따라 2020년이 넘어가면 OECD 평균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 교육정책

### ■ 국정 역사·한국사 교과서 폐기...검정 체제로 전환

박근혜 정부가 교육현장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했던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이 폐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업무지시'를 통해 2017년 5월 12일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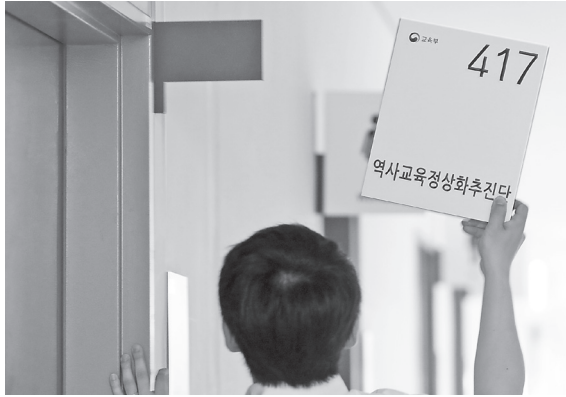
2015년 10월 교육부는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새 역사교과서를 기존의 검정 체제에서 국정 체제로 바꾼다고 발표하고 국사편찬위원회와 함께 2017학년도부터 중·고교 1학년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 아래 새 교과서를 개발해 왔다.

국정화 발표 이듬해인 2016년 12월 공개된 국정 역사교과서는 기존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 대신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을 써 뉴라이트 계열 건국절 사관을 받아들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관한 서술 분량이 길어지고, 독재·친일을 미화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리가 진행 중이던 때였다.

정치권과 학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교육현장 등 각계에서 비판이 일자 2016년 12월 27일 교육부는 2017년 3월부터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하지기로 한 방침을 철회했다. 대신 국·검정 혼용 체제를 택해 2018학년도부터 각 학교가 원하는 교과서를 쓸 수 있도록 한다고 발표했다. 2017년부터 국정교과서를

쓰려고 하는 학교는 교육청에 신청하면 '연구학교' 지정을 통해 시범적으로 교과서를 쓸 수 있도록 한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육부는 곧바로 국·검정 혼용 체제를 다시 검정 체제로 바꾸기로 했다. 2015년 국정화 발표 이전으로 돌아간 셈이다.



▲ 5월 3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직원이 사무실 명패를 내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했던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은 이날 해산했다.

검정 역사교과서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은 2018학년도부터 새 교과서를 사용해야 하는데 그간 검정→국정→국·검정 혼용→검정으로 교과서 발행 체제가 계속 바뀐 탓에 새 검정 역사교과서를 제대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검정교과서 제작 기간이 촉박하면 교과서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학계와 교육현장의 우려가 커지자 교육부는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과목만 새 교과서 사용 시기를 2020학년도로 2년 미루기로 했다. 국정교과서 편찬기준의 틀 위에서 기존의 검정교과서 집필기준 역시 정책연구를 통해 수정하기로 했다.

교육계는 새 검정교과서에 '독재'나 '친일파' 등에 관한 서술이 강화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등의 용어도 다시 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 ■ 초등학교 1·2학년 새 교과서 사용

교육과정이 바뀌면서(2015 개정 교육과정) 2017년 초등학교 1·2학년이 새 교과서를 사용했다.

새 교과서는 학습 분량을 20%가량 줄이고 학생 참여 활동을 늘리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교과서 쪽수를 보면,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교과서의 경우 국어는 기존보다 68쪽, 수학과 바른 생활·슬기로운 생활·즐거운 생활 통합교과는 각 102쪽이 줄었다.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에 맞는 낱말을 쓰고, 놀이를 통해 다양한 지식을 배우고 체험해 보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국어 이외의 다른 교과서는 글자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듣기와 말하기를 통해 학습 내용을 배울 수 있도록 구성해 글자를 잘 몰라도 익힐 수 있도록 했다.

과목별로 보면, 국어 교과서의 경우 연필 잡기부터 자음→모음→글자의 짜임→받침이 없는 글자→받침이 있는 글자→겹받침의 순서로 한글을 가르친다. 한글을 다 배우고 입학했다는 기정을 버리고 자음·모음을 모두 학교에서 가르친다는 방침이다. 초등 1·2학년 한글교육 시간도 기존의 27시간에서 60시간 이상으로 늘었다.

수학은 수와 기초 연산 원리를 배우는 내용을 강화하고 놀이와 접목해 설명하는 방식을 택했다. 수학 개념과 다양한 상황을 접목해 이야기하듯 구성한 '스토리텔링' 비중은 줄었다. 한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 스토리텔링 방식의 수학 공부는 다소 어렵다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다.

'안전한 생활'이라는 교과서도 새로 만들었다.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학교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교과서에는 생활안전, 교통안전, 학교폭력과 성폭력에 대한 주의사항을 강조한 신변안전과 화재·지진·태풍 등에 대한 대처방법을 가르치는 재난안전 관련 내용이 담겼다.

### ■ 자사고·외고·국제고, 후기고로 전환…일반고와 동시에 신입생 모집

교육부는 그동안 일반고보다 앞서 치러졌던 자율형 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신입생 선발 전형을 일반고와 동시에 치르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고등학교는 신입생 선발 시기에 따라 8~12월 초 학생을 뽑는 전기고와, 12월부터 이듬해 2월 초까지 전형을 진행하는 후기고로 나뉜다. 2017년까지는 과학고·외고·국제고·마이스터고 등 특수목적고와 특성학교·자사고가 전기고였고, 일반고와 자율형 공립고는 후기고였다.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 전기고에 지원하려는 학생은 전기고 가운데 한 곳만 지원(마이스터고 불합격자 등 제외)할 수 있고, 불합격하면 1~3지망을 정해 일반고를 비롯한 후기고에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2018년 치러질 고등학교 입시(2019학년도)부터는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신입생 모집 시기가 후기로 바뀐다. 특히 이중지원 금지 원칙도 생겨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지원하는 학생은 일반고를 동시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학생이 '고입 재수'를 피하려면 미달된 자사고·외고·국제고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일반고에 가려면 특별시·광역시는 각 교육청 여건에 따라 일반고 추가 배정을 받아야 한다. 도 단위 지역에서는 현재와 동일하게 인근 비평준화 지역 추가모집 일반고에 지원하면 된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자사고·외고·국제고 불합격생이 일반고 진학을 희망하면 일반고 배정 마지막 단계에 이들 학생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집에서 가까운 일반고에 가기 어려워지지만, 재수는 피할 수 있다.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일반고보다 학생을 먼저 선발하던 규정을 비꿈으로써 고교 서열화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정부 정책이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침해하고 학교의 학생 선발권을 제약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1년 연기...수능 영어 절대평가 실시

정부가 절대평가 확대를 목표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을 추진했지만, 여론의 반대에 부딪히자 1년을 늦췄다.

교육부는 2017년 8월 정부안 2개를 발표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이 가운데 하나를 개편안으로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영어와 한국사에 적용해 온 절대평가 방식에 1안은 통합사회·통합과학, 제2외국어/한문 두 개 영역을 추가하는 방안이고, 2안은 모든 영역을 절대평가로 바꾸는 방식이다.

추진 과정에서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교육현장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1안의 경우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영역이 섞여 혼란을 초래하고 학생들의 수험 부담을 덜어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교육 유발 문제도 해소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2안의 경우 절대평가가 확대되면 수능의 변별력이 줄어들고 수능 위주의 정시모집 비중이 더 축소되면서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학생부종합전형이 늘어날 것이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수능 개편 연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수시모집 확대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학생·학부모의 목소리였다. 결국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월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수능 개편을 유예하는 대신 1년 뒤인 2018년 8월까지 수능과 학생부 기재방식 개선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절대평가 범위 등 수능 개편 방향에 대한 교육 주체 간 견해차가 크고 사회적 합의도 충분하지 않았다.”며 절대평가를 선부르게 밀어붙인 교육부의 정책 혼선을 인정했다.

수능 개편 1년 유예로 2021학년도 수능은 2018학년도와 같은 방식으로 치러진다.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가/나형 택), 영어, 한국사(필수), 탐구(사회·과학·직업 택),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성되며, 탐구영역에서는 최대 2과목을 택할 수 있다. 영어와 한국사는 절대평가, 나머지 영역은 상대평가로 성적을 낸다.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2021학년도에 수능을 치를 학생들은 고1 때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등 신설 과목을 배운다. 통합사회는 기존 일반사회·윤리·지리·역사 등을, 통합과학은 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등의 개념을 융합해 종합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한 교과목이다. 이로 인해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과 수능 시험영역 사이의 불일치 문제는 2018년 2월까지 수능 출제범위를 따로 발표해 조정하기로 했다. 통합사회·통합과학 대신 사회문화, 한국지리, 생활과 윤리 등 다양한 시험 과목 가운데 최대 2과목을 선택해야 하는데 이 때문에 생기는 출제 범위 불일치 현상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학교 수업이 문제풀이식으로 바뀌는 등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 온 EBS 연계 출제의 경우 교육부가 2021학년도부터 연계율을 축소·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2018학년도 수능에서 절대평가가 도입된 영어영역은 원점수 90점 이상인 1등급 학생이 10.03%(약 5만3천 명)로 2017학년도 수능 1등급 비율 7.8%(4만2천여 명)보다 높았다.

## ■ 장시호·정유라 사태 이후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강화

교육부는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비선 실제’ 최순실 조카 장시호와 딸 정유라가 체육특기자 제도를 통해 대학 입학·졸업 과정에서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우선 2020학년도부터 대학이 체육특기자 입학전형을 진행할 때 학생부를 반영하도록 했다. 부정 입학을 줄이고 학생 선수가 대학에 적응할 수 있는 학습역량을 초·중·고교에서 키우도록 기존의 권장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바꾼 것이다.

2017학년도 입시에서 체육특기생을 뽑은 92개교 가운데 학생부를 반영한 학교는 59곳(64.1%)이었다.

전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각 대학은 포지션(단체종목·종목(개인종목)별 모집인원을 모집요강에 명시하고 면접·실기평가에 외부 인사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개선안이 잘 정착되도록 체육특기자 대입 서류 보존 기간도 현행 4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전형 개선 상황을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미 대학에 입학한 체육특기자의 경우 학사특례 인정 대상을 구체화했다. 공결 상한을 수업시수의 절반까지로, 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활동은 시험 기간에 대회에 출전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대학에 체육특기자의 학업 수준과 전문성, 진로 등을 고려해 맞춤형 교육과정도 편성토록 했다. 체육특기생이 프로선수로 뛰다가 나이가 들어 진로를 바꾸려면 대학에서 일정 수준의 전문성을 키워야 하기 때문이다.

초·중·고교생의 경우 정규 수업을 들은 뒤 훈련에 참가하는 원칙을 준수하되 수업을 듣기 어려우면 보충학습과 출결처리 상황을 학교가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했다.

2016년 8월 기준 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는 전국에 약 4천 480곳이다. 학생 선수로는 6만6천63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 ■ 서남대·대구외대·한중대 등 부실대학교 폐교

서남대와 대구외대·한중대 등 부실 대학들이 잇따라 폐교 명령을 받았다. 이들 대학은 재학생 학사 일정과 특별편입 일정 등을 고려해 2018년 2월 28일자로 문을 닫게 된다.

한중대는 교비회계 횡령·불법사용액 등 380억원을 13년째 회수하지 못했고, 교직원 임금도 330억원 이상 체불했다. 학생 총원율이 2017학년도 기준으로 신입생 27.3%, 재학생 32.6%에 불과하고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대구외대 역시 설립 당시 확보하지 못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려고 대학교비에서 불법으로 돈을 빼낸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법인이 재정적 기능을 하지 못해 교비회계에서 불법적으로 돈을 쓰기도 했다.

이들 대학은 2015년 1주기 대학교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았다.

교육부는 수차례 시정명령과 대학폐쇄 계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조치한다는 경고)를 했지만 이들 대학이 상당수의 시정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행정예고와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폐쇄 명령을 내렸다. 부실 대학이 퇴출당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이다.

서남대 역시 교육부 감사에서 설립자 이홍하 전 이사장이 교비 333억원을 횡령한 사실 등이 적발돼 교육부가 3차례에 걸쳐 시정명령과 폐쇄계고를 했다. 서남대는 횡령액 회수와 교직원 체불임금 보전 등 시정요구 일부를 이행하지 못했고, 수차례의 재정기여자(인수자) 물색 과정에서도 교육부가 정한 요건에 맞는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

폐교 명령에 따라 이들 대학의 학부 재적생과 대학원생 2천 명가량은 인근 대학의 동일·유사학과에 특별 편입된다. 교육계와 의료계의 관심이 높은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의 경우 2019학년도 신입생 정원은 한시적으로 전북지역 대학에 배정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2000년 이후 문을 닫았거나 2018년 2월까지 닫을 대학(전문대 포함)은 15곳이다. 11곳은 폐쇄명령을 받았고 4곳은 자진 폐교했다.

### ■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서 제외

교육부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했지만, 기간제 교사 4만6천여 명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규직 전환 심의위는 각 시·도 교육청에 제시한 공통 가이드라인에서 기간제 교사의 경우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인 정규 교원 채용의 사회적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해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고 밝혔다. 단,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 간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성과 상여금, 맞춤형 복지비 등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2017년 현재 국공립학교의 기간제 교원은 3만2천700여 명이고, 사립학교를 합치면 4만6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규직 전환 논의 대상이었던 7개 강사 직종 가운데 국공립학교에 1천 명가량 재직 중인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와 유치원 방과 후과정 강사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이들은 유아교육법상 행정직원에 해당하고, 많은 시·도 교육청에서 학교회계 직원으로 구분해 이미 전환이 이뤄진 점이 고려됐다. 인원수가 가장 많은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초등 스포츠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산학겸임 교사, 교과교실제 강사는 전환 대상에서 일단 제외됐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가 9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채용의 공정성과 교육현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초등 스포츠강사는 정부 공통 가이드라인상 정규직 예외사유로 규정된 점을 고려해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산학겸임 교사, 교과교실제 강사도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됐다. 지역 간 운영방식이 다른 다문화언어 강사는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국공립 학교회계 직원(교육공무직원) 1만2천 명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됐다.

심의위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강사 직종의 경우 계약 연장 시 평가 절차 간소화, 급여 인상 등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각 시·도 교육청은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지역 기간제 교원, 학교 강사, 학교회계 직원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 ■ 국가교육회의 출범

문재인 정부 초기의 교육정책 방향을 결정할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가 2017년 9월 출범했다. 국가교육회의 설치하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국가교육회의는 2019년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교육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고, 민감한 교육 현안에 대한 대안을 고민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당연직 위원 9명과 위촉직 위원 12명 등 21명으로 구성됐다. 의장은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이 맡았다. 당연직 위원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청와대 사회수석,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다. 초대 위촉직 위원으로는 강경숙 원광대 교수, 권호열 강원대 교수, 김정안 서울시교육청 학교혁신지원센터장, 조신 경기도교육재정기획심의위원회 위원, 황선준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등이다.

국가교육회의는 전체회의와 함께 분야별로 전문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위원회로 나뉘어 운영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양성 방안은 물론, 유아교육·보육 통합, 자사고·외고 폐지 방안,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전환, 고교 성취평가제(내신 절대평가) 시행, 특수학교 설립 확대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 ■ 유치원 방과후 영어 특별활동 금지 추진

교육부가 2020년 유치원 교육과정 개편에 맞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방과후 영어 특별활동 금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4년 9월 발효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초등학교 3학년 전에는 영어 정규수업이 금지됐고, 1·2학년 대상 영어 방과후 수업은 3년 반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신학기부터 할 수 없도록 했다.

유치원·어린이집은 정규 교육과정에 영어가 빠져 있지만, 선행학습금지법 대상이 아니어서 방과후 특별활동으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다. 실제로 교육부가 2017년 실시한 유아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공립유치원의 32.3%, 사립유치원의 61.6%

등 전체 유치원의 46.3%가 방과후 영어 특별활동을 운영했다. 과학(30.5%), 한글(9.2%), 수학(7.2%)보다 비율이 높았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방과후 영어 특별활동 금지는 오히려 시민층을 값비싼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 등 논란이 거셌다. 교육부 역시 영어교육 수요가 엄연히 존재하는 점, 유아 단계 사교육 팽창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전문가와 시·도 교육청 협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적용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유아·초·중등교육

### ■ 유아교육

유치원 수는 1980년 901개소에서 1990년 8천354개소로 급증했으나, 이후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신규 설립이 주춤하며 증가세가 소폭 이어졌다. 2000년 8천494개소, 2005년 8천275개소, 2012년 8천538개소, 2013년 8천561개소, 2014년 8천826개소, 2015년 8천930개소, 2016년 8천987개소, 2017년 9천29개소로 집계됐다.

유치원 원아 수는 1965년 1만9천566명에서 1970년 2만2천271명, 1980년 6만6천433명, 1990년 4만4천532명으로 증가했으며 2013년에는 65만9천265명으로 1965년 대비 34배 가까이 늘었다. 2014년에는 65만2천546명으로 2013년 대비 6천719명 줄었으나, 2015년 68만2천553명, 2016년 70만4천138명으로 반등했다. 2017년에는 69만4천631명으로 전년보다 9천500여 명 감소했다.

원아 수가 2000년 이후 대체로 감소세를 보이던 2011년 이후 증가세를 보인 것은 누리과정인 2012년 만 5세를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간 데 이어 2013년부터 만 3~4세로 확대됨에 따라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2006년 쌍춘년, 2007년 '황금돼지'해, 2010년 '백호'해 등을 맞아 결혼과 출산이 증가한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추정됐다.

### ■ 초등학교

초등학교 수는 1945년 2천834개교에서 1965년 5천125개교, 1985년 6천519개교로 늘었다. 이후 1990년 6천335개교, 2000년 5천267개교로 줄었다가 2001년 5천322개교, 2005년 5천646개교, 2009년 5천829개교, 2013년 5천913개교, 2014년 5천934개교, 2015년 5천978개교, 2016년 6천1개교, 2017년 6천40개교로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초등학교 학생 수는 1965년 494만1천345명에서 2013년에는 278만4천 명으로 줄었다. 초등학교 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1970년으로 574만9천301명이었으며 이후 점차 감소 추세를 보였다. 특히 저출산 영향으로 2011년 313만2천477명에서 2012년 295만1천995명으로 200만 명대로 떨어졌고 2013년 278만4천 명, 2014년 272만8천509명, 2015년 271만4천610명으로 감소했다. 2016년과 2017년은 각각 267만2천843명과 267만4천227명으로

소폭 반등했다.

초등학교 교원 수는 1965년 7만9천164명에서 2011년 18만625명, 2012년 18만1천435명, 2013년 18만1천585명, 2014년 18만2천672명으로 늘었다. 2015년에는 18만2천658명으로 약간 줄었다가 2016년 18만3천452명, 2017년 18만4천358명으로 다시 늘었다.

성별로는 1965년에는 남성이 5만8천957명, 여성이 2만207명으로 남성 교원이 월등히 많았으나, 1990년 남성이 6만8천196명, 여성이 6만8천604명으로 역전됐다. 2017년에는 남성이 4만2천294명, 여성이 14만2천65명으로 여성 교원이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학급당 학생 수는 2000년 35.8명, 2002년 34.9명, 2004년 32.9명, 2006년 30.9명으로 점차 줄어들다가 2008년 29.2명으로 20명대로 떨어졌다. 이후 2011년 25.5명, 2012년 24.3명, 2013년 23.2명, 2014년 22.8명, 2015년 22.6명, 2016년 22.4명, 2017년 22.3명으로 계속 줄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001년 28.7명, 2003년 27.9명, 2005년 25.1명, 2007년 22.9명, 2009년 19.8명, 2011년 17.3명, 2012년 16.3명, 2013년 15.3명, 2014년 14.9명, 2015년 14.9명, 2016년 14.6명, 2017년 14.5명으로 점차 줄었다.

### ■ 중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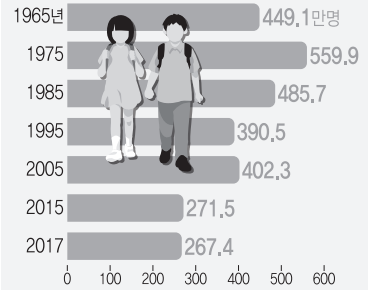
중학교 진학률은 1965년 54.3%에 그쳤으나 1980년 95.8%로 증가했다. 1995년 이후부터 99.9%의 진학률을 기록해 2017년 현재 거의 완전 진학에 이르렀다.

중학교 수는 1965년 1천208개교에서 2012년 3천166개교, 2013년 3천173개교, 2014년 3천186개교, 2015년 3천204개교, 2016년 3천209개교, 2017년 3천213개교로 계속 늘었다.

학생 수는 1965년 76만1천341명에서 1985년 278만2천173명에 이를 때까지 계속 증가했다. 이후 2013년 180만4천189명, 2014년 171만7천911명, 2015년 158만5천951명, 2016년 145만7천490명, 2017년 138만1천334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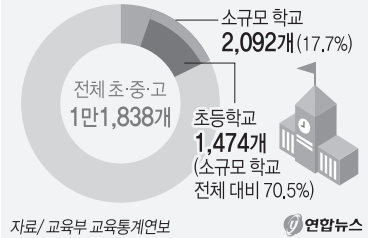
중학교 교원 수는 1965년 1만9천67명에서 1995년 9만9천931명으로 늘었다. 이후 점차 감소하다가 2000년 이후 증가해 2013년 11만2천690명, 2014년 11만3천349명, 2015년 11만1천247명이었으며, 2016년에는 10만9천525명이었고 2017년에는 10만9

### 전국 초등학교 증감 추이



### 전교생 60명이하 소규모 학교 현황

2016년 기준



자료/교육부 교육통계연보

연말뉴스